



# 감염병 차단 모범사례로 전국이 '주목'

▶ 코로나19 광복절 집회 확산 원천 차단 및 전주시 공공시설·주관행사 전면 중단 기자 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왼쪽).

8.15 광복절 연휴 이후 급증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섣다른 명령을 내리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나선 전주시의 위기대응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찬사를 받은 전주시가 방역에서도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모범사례로 손꼽힌 것이다. 전주시가 코로나19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펼쳐온 노력들을 들여다본다.

■ 편집자주

## 코로나19 원천 차단 위해 당근과 채찍 꺼내다

잡잡해지나 싶던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지난달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급변했다. 매일 전국적으로 수백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하며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한 동안 신규 확진자가 뜸해서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전북지역마저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시민들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면서 확진세가 수그러든 모양새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적용하면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방문판매업소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00여 곳이 사실상 섰다운 된 것이다.

현장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계도 및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전주지역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들이 전주시가 코로나19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대부분 문을 닫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경 합동대책반이 매일 이근에 고위험

광복절 연휴 기점으로 '급변' 시,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 시민들도 방역에 적극 협조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실시 현재, 고발까지 이어진 업소 無

시설 12개 업종 1361개소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 3일 기준으로 12일간 단 8건의 미이행 업소가 적발됐다. 이는 전체 고위험시설의 약 0.59%로, ▲유흥주점·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집단운동(GX류) ▲방문판매업 ▲뷔페 등의 업종에서는 단 한건의 위반사실도 적발되지 않아 전주시 고강도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의 결과, 현재까지 전주시의 행정명령을 2차까지 위반해 고발까지 이어진 업소는 없다.

반대로,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해서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끊긴 고위험시설 업주와 종사자 등에게는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기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 코로나19 원천봉쇄 동참하는 전주지역 고위험시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화산체육관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사진 위)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대 중단 간담회(사진 아래).

중대본 "환자 대상 역학조사 추적관리 가용 모든 인력 투입" 시 역학추적 관리, 우수사례로 역학조사 외 선별진료소 보건소 코로나상황실 등 운영

## 중대본, '코로나19 방역, 전주시처럼'

전주시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하면서 전국 모범사례로 주목 받았다.

실제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주시의 보건소 사례처럼 다른 업무보다는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추적관리에 가용한 모든 인력을 투입을 해서 노력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역학조사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시의 코로나19 역학추적 관리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주시 역학조사를 우수사례로 언급한 것은 지난달 25일과 27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초기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주시 사례를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이어 27일 브리핑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자체별로 조사 중인, 또 미 분류인 환자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주시 보건소 사례처럼 가용한 모든 인력을 역학조사와 환자추적에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이 전담해온 역학조사에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2개 팀을 투입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10개 팀 60여 명으로 확대 투입했다. 역학조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판단에서였다.

보건소 직원들은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는 물론이고, 딱진 선별진료

소·화산체육관 임시선별진료소, 상담을 위한 보건소 코로나상황실 등에서 밤을 흘려왔다.

착한 임대·해고없는 도시 선언 등 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사례로 언급

## 문 대통령, '전주, 코로나19 대응 모범도시'

전주시는 앞서 8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민들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주발(發) 상생실현인 착한 임대운동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나선 전주시를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는 도시로 평가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한 지자체를 연이어 모범사례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춘행렬의 포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17일 4개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와 3.1절 기념식에서 각각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3월에는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5만 명에게 52만7천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전주시의 수범사례를 대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4월 22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이라며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사회적 약속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극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서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 주고 있다"면서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예식장 하객 최소 보증인원 줄이는 등 예식업체 큰 양보 이끌어내기도

## 감염병 위기 극복 위한 상생실현은 계속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주시의 상생실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불거진 예식업체와 예비부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예비부부들을 위해 예식장 하객 최소 보증인원을 40~50% 수준으로 줄여주고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예식을 연기해주시기로 하는 주요 7개 예식업체의 큰 양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어떤 경로로 감염이 이뤄지고,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를 면밀하고 신속히 파악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도록 역학추적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거대한 위기에 몰려 있고, 경제와 일자리 문제로 삶의 위기에 처한 분들도 많다"면서 "코로나19, 이 거대한 위기를 '착한 임대운동', '재난기본소득', '해고없는 도시'와 같은 단단한 사회적 연대로 정면 돌파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8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우리는 예전의 일상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비상시에 필요로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